

##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p><b>제8조(학교 규칙)</b></p> <p>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p> <p>② 학칙의 기재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8조(학교 규칙)</b></p> <p>① <u>학교자치위원회(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u>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p> <p><u>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u></li> <li><u>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u></li> <li><u>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u></li> <li><u>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u></li> <li><u>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u></li> <li><u>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u></li> <li><u>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u></li> <li><u>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u></li> <li><u>9. 학칙개정절차</u></li> <li><u>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u></li> </ol> <p>③ <u>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b>제17조(학생자치활동)</b></p> <p>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b>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b></p> <p>① <u>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u></p> <p>④ <u>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u></li> </ol>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자치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외의 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의3(학생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17조의4(인권교육 등)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생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학칙 및 학칙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교육기본법)
  3.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인 경우,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미국 텀커 판례)
- ② 학생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장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③ 학생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의2(학생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학생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 **제18조의 3(공공변호인 선임)**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청이 있거나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공공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제1항에 따른 변호를 위하여 공공변호인을 둔다.

③ 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3.21]</p>	<p><u>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u></p> <p>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3.21]</p>
<p><b>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b></p> <p>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b></p> <p>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b>제18조의4(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b></p> <p>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del><b>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b></del></p> <p><del>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del></p>
<p><b>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b></p> <p>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1조 (학교자치위원회의 설치)</b></p> <p>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u>학교자치위원회</u>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u>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자치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과 교사회, 직원회, 총학부모회, 총학생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교사위원, 직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u></p> <p>③ 학교자치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현행</b></p>	<p style="text-align: center;"><b>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b></p>
<p><b>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b></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조 삭제. 법 제8조로.</p>

<p>&lt;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li> <li>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li> <li>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li> <li>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li> <li>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li> <li>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li> <li>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li> <li>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li> <li>9. 학칙개정절차</li> <li>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삭제 &lt;2005.1.29&gt;</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18&gt;</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신설 2011.3.18, 2012.4.20&gt;</p> <p>[제목개정 2011.3.18]</p> <p><b>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b></p> <p>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b>제31조(학생의 징계 등)</b></p> <p>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1.3.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내의 봉사</li> <li>2. 사회봉사</li> <li>3. 특별교육이수</li> <li>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5. 퇴학처분</li> </ol>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p>	<p>제30조 삭제</p> <p>제31조 삭제. 법 제18조로.</p>
---	---

<p>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lt;신설 2011.3.18&gt;</p> <p>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18&gt;</p> <p>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li> <li>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li> <li>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li> </ol> <p>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3.18&gt;</p> <p>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3.18&gt;</p> <p>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1.3.18&gt;</p>	
<p><b>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b></p> <p>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li> <li>2. 피청구인</li> <li>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li> <li>4. 청구의 취지 및 이유</li> </ol> <p>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b></p> <p>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li> <li>2. 피청구인</li> <li>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li> <li>4. 청구의 취지 및 이유</li> </ol> <p>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건번호 및 사건명</li> <li>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li> <li>3. 퇴학조치의 원인</li> <li>4. 결정내용</li> <li>5. 결정의 이유</li> <li>6. 결정한 날짜</li> </ol> <p>[본조신설 2008.2.22]</p> <p><b>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b></p> <p>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1.11.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li> <li>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li> <li>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li> <li>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li> <li>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li> <li>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li> </ol>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08.2.22]</p>	<p>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건번호 및 사건명</li> <li>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li> <li>3. 퇴학조치의 원인</li> <li>4. 결정내용</li> <li>5. 결정의 이유</li> <li>6. 결정한 날짜</li> </ol> <p>[본조신설 2008.2.22]</p> <p><b>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b></p> <p>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1.11.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li> <li>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li> <li>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li> <li>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li> <li>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li> <li>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li> </ol>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08.2.22]</p>
---	---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의 4 삭제. 법 제31조(학교자치위원회 설치)로.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  
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안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18]